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8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12일 (음력 8월 3일) 수요일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촉 미룬 국회 비판 '붓물'

민주당 오늘까지 추천자 확정할듯...한국당은 '깜깜 무소식'

법시행일 14일 위원회 출범 불가...선임 원칙·기준 공개해야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을 사흘 앞두고도 조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낙장 대응과 함께 각 정당이 위원 추천 원칙·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결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은 3명이다. 의장·여야가 1명씩 정한다. 상임위원 3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특별법 시행일은 오는 14일로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간(필요시 1년 연장) 진상 규명 활동을 한다.

현재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학회 연구소 박사,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민주당은 민병로 전남대 법전원 교수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또는 12일께 원내대표 상의 뒤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천위원 4명 명단(상임 1·비상임 3)을 의사과에 넘길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 사이 공모를 진행, 막바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상임위원에는 5명, 비상임위원에는 12명이 지원했다.

상임위원은 최병모·최환 변호사, 송순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3명 중 1명이 추천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임위원으로 평화당 추천 인사(민병로 교수)를 대신 선임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명을 뽑기 위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민주당이 평화당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배경은 자유한국당이 야당 류 4명 중 3명(상임 1·비상임 2)을 추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평화당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만큼 한국당이 기존

2명에서 1명을 더 추천하겠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추천 시기·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6개월간 위원 추천을 외면한 셈이다. 지난 3월27일 5·18 진상 규명 조사위 설립준비법을 꾸린 국방부는 4월30일까지 위원 추천을 국회에 요구했고, 5·18 재단과 5월 단체가 늦어도 6월 말까지 위원 위촉을 촉구했지만 '깜깜 무소식'이었다.

지난달 21일 5월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고 나서야 낙장 대응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때문에 조사관 채용, 규칙 제정 등 사무처 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정치권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마저 최근에서야 의견을 물어왔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진상 규명은 시대적 과제다.

국회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는 "사지명에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 등 가해자들에게 참회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다. 진상 규명에 대한 여론이 이어지면, 위원회 구성이 지체되는 안 된다"며 "국회가 위원 위촉을 미룬 것은 민의를 대변하지 않은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조 상임이사는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진상조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정당이 대통령에게 9명 명단을 보고하기 전에 선임 이유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간사 송갑석 의원은 "서둘러 TF팀을 꾸리고 위촉해야 하는데 늦었다"며 "여러 상향안이 있었지만,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작의 역사 왜곡·조작, 최초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압매장 사건 등이다.

신봉우 기자

Photo漫評

자랑스런 도지사

광역단체장 17명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지지도가 지난달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10월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 7000명당 시·도별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8년 8월 월간 광역자치단체평가 결과, 김 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59.6%로 지난달에 비해 2.2%p 떨어졌지만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58.7%로 2위 자리를 지켰다. 3위는 권영진 대구시장(55.8%)으로 지난 달 6위에서 3계단 올라섰다.

이밖에 4위 이철우 경북도지사(55.4%) 45위 이춘희 세종시장(55.2%) 46위 송하진 전북도지사(54.3%) 47위 최문순 강원도지사(54.0%) 48위 이시종 충북도지사(53.8%) 49위 이용섭 광주시장(47.6%) 410위 박원순 서울시장(45.6%)으로 기록됐다. 관련 인사의 승·하락은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시민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협약식

한전KPS(주)한빛3사업처, 영광사업장서 협약체결



한전KPS(주) 한빛사업처는 11일 영광사업장에서 김재갑 처장, 홍문기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협약식

원장 등 노사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협약식

을 가졌다.

이날 협약체결은 노사간의 우의를 다지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신뢰를 구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룩함으로써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PS(주) 한빛3사업처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무결점 정비의 전통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고용환경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으로써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데 노사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재갑 처장은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회사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우리 회사가 앞장서 안전보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문기 노동위원장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교육에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강화시키는 등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전남도, 추석 앞두고 특별감찰

오는 21일까지 2주간 공직비리 근절

전남도는 국무총리 해외 순방, 남북정상 회담, 추석 명절 등으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2주간 강도높은 공직감찰 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찰활동은 도 분청, 직속기관·사업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은 물론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무원의 선불 등 금품 수수행위, 공직비위, 업무태만, 복무기강 문란 및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벌인다.

명절 분위기에 관승한 공무원 무단이직, 출장을 방한한 조기퇴근 및 근무시간 중 음주, 민원처리 지연·방치 등 소극 행태와 근거 없는 관행적 행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추석은 민선7기 출범 후 처음 맞는 큰 명절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며 "특별감찰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해 명절 분위기에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매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정남진장흥
한우
Jeongnamjin Jangheung Korean Beef

값싸고 질 좋은 장흥한우